

· 해설 내용은 개정된 법령(2022. 7월 기준)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지방자치론 전체 기출문제(2012~2021년)는 네이버카페 '김재준 행정학'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 1.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추진 및 행정수행에 적합
- ② 주민통제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
- ③ 전국적·광역적 규모의 사무처리에 유리
- ④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

문 2.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에서 중층제의 장·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중층제에서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행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.
- ②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간 갈등을 광역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- ③ 중층제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행정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.
- ④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.

문 3.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.
- ② 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, 자치행정권, 자치재정권, 자치조직권, 자치사법권 등이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자치권 중 자치사법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.
- ④ 자치권 부여와 관련하여 자치권의 내용은 어느 국가나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.

문 4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이라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③

· ③ 중앙집권의 장점이다.

2. ④

· 중층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중앙정부에 의사가 전달되므로 의사 전달이 지연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3. ④

· 자치권의 내용은 국가마다 상이하다.

4. ②

·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: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.

문 5. 「지방공기업법」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.
- ② 보유차량이 30대 이상인 자동차 운송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직영기업으로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기본사항을 정해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문 6. 주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은 없지만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.
- ②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다.
- ③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25세 이상,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 요건은 30세 이상이다.
- ④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간은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이다.

정답 및 해설

5. ②

-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: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공기업법 제5조: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·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·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2항: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,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6. ②, ④(기존 정답: ④)

- ② 공직선거법 제15조(선거권)
 -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-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- ※ 2020. 1. 13.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19세 이상 → 18세 이상으로 개정되었다.
- ④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: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.

문 7.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는 랭그로드(G. Langrod)이다.
- ② ‘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훈련의 장이다’라는 말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.
- ③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부정설을 제기하는 학자는 ‘현대사회는 민주적 지방분권보다 능률적 중앙집권화가 더 중요하다’고 주장한다.
- ④ 프랑스 학자 토크빌(A. de Toqueville)도 미국 민주주의론(Democracy in America) 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.

문 8. 외국의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미국은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 정부를 거쳐 ‘신연방제’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약하였다.
- ② 일본은 1990년대 「지방분권추진법」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였다.
-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분권 및 자치 기능 역시 영국에 비해 더욱 발달하였다.
-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문가가 강조되고 시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약시장-의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.

정답 및 해설

7. ①

- 무랭(Leo Moulin)과 랭그로드(Georges Langrod)는 중앙집권적인 체계에서 민주주의 학습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.

8. ②

- ① 미국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신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며, 닉슨행정부와 레이건행 정부를 거쳐 ‘신연방제’의 이름하에 연방의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였다.
- ③ 프랑스의 근대적 지방제도는 영국보다 먼저 시작하였으나, 분권 및 자치 기능은 영국이 먼저 발달하였다.
- ④ 뉴딜 이후 지방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지방정부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, 시장이 보다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‘강시장-의회’제 및 행정의 전문성을 지닌 ‘수석행정관-강시장-의회’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.

문 9. 「지방재정법」상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재정위험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,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④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지방자치단체가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문 10.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② 주민의 의무부과 사항에 대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- ③ 서울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서울특별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9. ④

- 지방재정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: 상황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

10. ①, ④(기존 정답 : ①)

- 지방자치법 제28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지방자치법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- ※ 지방자치법이 개정·시행(2022. 1. 13.)되면서 규칙의 제정범위가 넓어졌다.

문 11.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- | |
|---|
| 가.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야 한다.
나.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다. 서울특별시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·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라.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조정할 수 있다. |
|---|

- ① 가
- ② 나, 다
- ③ 가, 나, 다
- ④ 가, 나, 다, 라

문 12.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(先決處分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.
- ②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선결처분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15일 전까지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,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.

정답 및 해설

11. 정답없음(기존 정답: ①)

- 가. 서울특별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나. 지방자치법 제166조: 시·도와 시·군·구 간의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- 다. 지방자치법 제168조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·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시·군·구나 그 장이면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라.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12. ④

- 지방자치법 제122조: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- 지방자치법상 재승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.

문 13. 「지방재정법」상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③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문 14. 「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」에서 제시된 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.
- ③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한다.
- ④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「상훈법」 제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한다.

문 15.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서울특별시 의회는 14일의 범위에서, 자치구 의회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- ② 서울특별시 의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관계공무원이 출석·답변할 수 있다.
- ③ 서울특별시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서울특별시는 시의회가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문 16. 「지방교부세법」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지방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.
- ②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와 목적세 수입액으로 하며,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.
- ③ 지방교부세는 1년을 4기(期)로 나누어 교부한다. 다만,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3. ④

· 지방재정법 제11조 제3항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4. ③

·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: 서울특별시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행사한다.

정답 및 해설

15. ③

·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: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16. ②

· 지방교부세법 제8조 제2항: 기준세율은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하고, 기준세율은 「지방세법」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.

문 17. 「주민투표법」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
 ㄴ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
 ㄷ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ㄹ.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
 ㅁ.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

- ① ㄱ, ㄴ ② ㄱ, ㄴ, ㄷ
 ③ ㄱ, ㄴ, ㄷ, ㄹ ④ ㄱ, ㄴ, ㄷ, ㄹ, ㅁ

문 18. 지방정치의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다원론에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영향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, 권력을 나누어 가진 다수의 집단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나간다.
 ②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.
 ③ 스톤(Stone)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‘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’으로 정의된다.
 ④ 헌터(F. Hunter)와 몰로치(H. Molotch)는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권력이 지역의 경제엘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.

정답 및 해설

17. ④

-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(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)
 1.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
 2.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
 3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가. 예산·편성·의결 및 집행
 나. 회계·계약 및 재산관리
 3의2. 지방세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
 4.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·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
 5.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6. 동일한 사항(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

18. ②

- 레짐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연합 내지는 레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.
 · 스톤(Stone)에 의하면 레짐이론에서 레짐이란 ‘지배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형성하는 비공식적 연합’으로 정의하였다.

문 19.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(轉用)할 수 있다.
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 ③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.
 ④ 예산은 예산총칙, 세입·세출예산, 계속비,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(明示移越費)를 총칭한다.

문 20. <보기>는 「지방교부세법」상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이다. ㉠~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-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(㉠)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 ·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,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(㉡) (으)로 정한다.
 ·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(㉢)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교부한다.
 · 부동산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(㉤) 교부하여야 한다.

- | | ㉠ | ㉡ | ㉢ | ㉤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|---|
| ① 1천분의 1.924 | 대통령령 | 100분의 50 | 전액 | |
| ② 1만분의 1.924 | 조례 | 100분의 50 | 일부 | |
| ③ 1만분의 1.924 | 대통령령 | 100분의 40 | 전액 | |
| ④ 1천분의 1.924 | 조례 | 100분의 40 | 일부 | |

정답 및 해설

19. ③

-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
 -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(章)·관(款)·항(項)으로 구분한다.
 -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·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.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·부문·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, 세부항목은 단위사업·세부사업·목으로 구분한다.

20. ③

- ㉠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
 · ㉡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2항
 · ㉢ 지방교부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
 · 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제1항